"수장 없는 헌재 언제까지…" 비난 고조

■ 헌재소장 공백 한 달

19일 첫 평의…중요 사건 처리 지연 '전전긍긍'

대통령 청문 보고서 송부 정치권 충돌 재연될 듯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겨 중요 사건들의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이 임기 문제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계속하다 헌재소장을 공석으로 한 채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4기 헌법재판소가 꾸려진 지 15일로 한 달이 지났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10일 처리시한(20일)을 넘겼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상태여서 오는 20일 이후 전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전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소장 권한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의권자인 국회가 모든 문제를 판단해 결정해주면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만 말했다.

헌재는 소장 공석 상태와 관련해 이처럼 극도로 말을 아끼며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4기 재판부는 19일 재판관 8명으로 첫 평의를 열고, 26일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 재판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재판관 전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評議)를 거쳐야 한다. 평의는 소장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평의는 권한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이 이끌게 된다.

26일에는 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 등 비교적 심리가 어렵지 않은 사건들 위주로 결정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요 사건들의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이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절차상 문제를 놓고 헌법 수호의 수장격인 헌재소장 인준을 거부하는 태도는 명분이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달 15~17일 본사 인터넷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분의 2 이상인 71%가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사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던 만큼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공석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법사위 동의 없이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직접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다시 임명되더라도 국회가 다음달 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는 사실상 11월 중순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내달 중순 대폭 개편…참여정부 임기말 새진용

■ 潘총장 선출 외교 안보팀 개편?

청와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장관의 후임 인선 시점을 참여정부 임기말 외교안보팀 진용을 새롭게 갖추는 외교안보라인 대폭 개편의 계기로 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 시점을 반 장관 후임을 인선하는 시점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반 장관이 물러나는 시기도 당초 차기 유엔 총장으로 확정되는 유엔 총회(14일) 시점으로 잡았다가, 북핵실험이 강행되면서 내달 중순께로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외교안보팀 개편 폭의 확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 외교 사표처리 시기**=반기문 장관이 차기 유엔총장으로 확정됐지만 최소한 내달 초순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반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시기와 관련, "장관직을 유지하며 할 일도 있는 만큼 이번달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년 1월1일 유엔사무총장 임기 개시를 앞두고 사무총장 인수.인계에 전념하기 위한 장관직 사표 수리 시점의 마지노선을 대략 내달 중순쯤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그 시점까지는 장관직을 계속 갖도록 한다는 얘기다.

지난 14일 오전(한국 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된 반기문장관이 각국 대표들의 환영을 받으며 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임 외교장관**=후임 외교장관으로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뜻에 정통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송민순 장관 카드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안보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창의적인 해법 마련이나 외교안보 현안의 조정능력면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노 대통령의 신임을 높이 사고 있다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국방장관, 국정원장 교체**=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승규 국정원장은 교체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지율 지난 달부터 급락…10%대로

고건의 '고심'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20%대 중반의 지지율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과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을 보이며 선두권을 유지했던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달부터 급락세를 보이며 20%대를 넘나들더니 이달 들어 10%대로 급락, 선두권에서 처지고 있다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 3.7%)에 따르면 고전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달과 비교해 6.1%포인트 하락한 12.9%로 1, 2위와의 격차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15일 오전 경북 경주 반월성 '신라 김씨 12대왕 추향대제'에서 초헌관을 맡은 고건 전 국무총리가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중도세력 보수화 영향

이에 반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5.6%포인트가 오른 31.7%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1.8%포인트 상승한 19.4%를 기록, 2위를 고수했다

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고건 전 총리는 17.6%의 지지도를 나타내 34.1%의 이명박 전 시장에 더블 스코어 차이로 뒤졌으며 박근혜 전 대표(22.6%)에도 5%나 처졌다.

특히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상승세 혹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는' 고 전 총리 특유의 모호한 정치적 성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고건 전 총리가 '중도실용개혁세력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행동을 보이고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흡인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북 핵실험 사태 등으로 보수층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일부 중도세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 급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모호한 정치성향 핸디캡

고건 전 총리 핵심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은 반면, 정치권 밖에 머무르고 있는 고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며 "고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세를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도청이전 1년, 남은 숙제

박치경

정치부 차장

15일로 이전 완료 1년을 맞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의 전남도청 주변은 날마다 얼굴이 바뀌고 있다.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에서는 자고나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몰라보게 높아지고 덤프트럭 행렬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활기찬 겉모습과는 달리 근심도 있다. 도청과 떨어진 동부지역 주민들과 마음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 이전 1주년에 임박해 전남도청 고위 간부에게 이전 효과를 분석해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며"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전효과는 업소 매출 증가 등 사실상 목포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의 대답에는 도청이전으로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잠재해 있는 터에 굳이 서남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아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도 깔려 있었다. 더욱이 전남도의 핵심인 도청이 서남권으로 옮겨가고 지역지도를 바꿀 대규모 개발계획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도 신도청 주변인 해남·영암 간척지에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동부권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최근 여수지역 주민들이 전남도가 추진 중인 거북선 모형 유람선 운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량대첩 현창사업'을 놓고 제기하고 있는 불만도 같은 맥락이다. "거북선은 여수 선소 등에서 건조돼 전투에 쓰였는데 왜 거북선이 동원되지도 않은 해남 울돌목에서 사업을 벌이려하느냐"는 항의다. 여수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도청을 서남권으로 옮기고 지역 유래가 깃든 사업마저도 그 쪽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근 자체적인 '거북선 프로젝트'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도정운영의 핵심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17일 박 지사의 발길은 여수로 예정돼 있다. 세계박람회 사무국(B1E)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의 여수 방문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세계박람회라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당연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동부권에 대한 박 지사의 고뇌가 크다는 것도 암시한다. 그는 도정을 알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역민심을 다독인다.

도청이전 1년과 함께 앞으로 해나갈 일들은 매우 많다. 그 가운데 도청과 멀어진 동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가까이 끌어오는 것 또한 중요한 숙제다.

/unipark@kwangju.co.kr